

조선일보 사설의 담론분석

박 동섭(littleegan@gmail.com)

[조선일보사설] 새 정부 들어 도심집회, 준법시위 희망 보여줬다.(2008. 3. 28 전국교육행동 관련)

대학생과 시민단체가 대학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며 가진 28일 서울시청 앞 집회가 별 탈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새 정부 들어 도심서 열린 첫 대규모 집회가 질서 있게 끝나 폭력 없는 평화 집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오후 3시쯤 시청 광장엔 대학생과 학부모, 시민단체 회원 등 7000여명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오후 6시부터 시청 광장~을지로 2가~청계천변 도로~청계광장까지 2km구간을 행진했다. 경찰은 노란색 띠로 폴리스라인을 만들면서 편도 3개 차선을 행진 대열에 열어줬다. 행진 대열은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고 호각을 불긴 했지만 1시간여 행진하면서 폴리스라인을 넘지 않았다. 행진에 앞서 시청 광장 행사도 질서 있게 진행됐고 참석자들은 집회 후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도 보여줬다.

이날 집회는 경찰이 체포전담팀 300명을 투입해 불법 시위자를 체포하겠다고 예고해 주목 받았다. 경찰은 연행자들을 훈방하지 않고 즉시에 넘기겠다고 경고했다. 행사장 주변과 행진 도로변에 동원된 경찰도 1만4000명이나 됐다(Park's comment: 갑자기 3천 궁녀 생각이). 그러나 기동대 소속 경찰로 구성된 체포전담팀을 투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 통제에 잘 따랐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전국에서 하루 평균 32건씩 1만 1904건의 집회와 시위가 열렸다. 시청 앞 같은 도심에서 시위 집회가 한번 열리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지기 일쑤였다. 경찰이 집회를 통제하려고 세워 놓은 뒤 경찰버스가 부서지거나 뒤집히곤 했다. 그런 불법시위로 인한 경제 손실이 12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왔다. 그러나 28일 서울 도심 등록금 집회는 시위대가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도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집회는 도심 시위 자체가 자체돼야 한다는 점을 새삼 보여줬다. 집회 참가자들을 태우고 전국에서 온 버스와 일반차량, 경찰차가 엉킨 데다 차도를 차지한 행진 때문에 시민들이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려야 했다. 준법, 평화시위에서 더 나아가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시민친화형(型) 집회를 모색해야 한다.

과연 조선일보,,,,,,라고 해야 할까요(어느 부대학생의 녀두리)

애초에 사건의 쟁점인 ‘등록금’을 비켜나게 기술함으로써 과중한 등록금 인상이라는 핵심논점을 죽여 버리고 평화시위라는 주변논점을 전면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사건의 쟁점을 완전히 뒤틀어 놓았네요.

혹은 정작 다뤄야 할 ‘등록금’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다루지 않아도 될 ‘시위’에 대한 이야기만을 잔뜩 실어 놓았네요.

거기에 ‘평화시위’라는 긍정적인 개념과 그 반의어인 불법시위를 동시에 부각시킴으로써 시위로 인해 야기되는 피해들을 보여주고 그러한 시위가(심지어 평화시위마저도) 공익을 훼손한다는 인상을 독자들에게 강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단어들을 배치했네요. 이것 참 언어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야 할지, 글을 잘 쓴다고 해야 할지(Park' comment: 교묘하게 자신의 신문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글안에 녹여 놨다고 해야 할까?)

덧) 불법시위에 대해서 별로 옹호하는 편도 아니고 별로 옹호하고 싶은 편도 아니지만 저런 식으로 어떠한 개념의 부정적인 면만을 기술하는 것은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프랑스 시민혁명, 미국 독립전쟁(이건 불법시위에 속한다고 보기에 좀 애매한 감이 있지만) 3·1만세 시위, 4·19혁명, 68프랑스-미국-일본 학생혁명, 대규모 베트남 반전시위, 부마항쟁, 5·18 광주 민주항쟁, 6월 항쟁 모두가 불법 시위들이었고 그 때문에 기존의 사회는 분명 경제적인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그러한 경제적 피해들을 가져다 준 ‘불법시위’가 이루어낸 위대한 역사적 전진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요.

가치 지향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비단 심리학자 뿐만은 아니다. 역사학자들도 역사를 바라볼 때 가치 지향적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정말 사실일 것이라 믿고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도 그것을 서술한 역사학자들의 가치 지향성이 여기저기 묻어있음을 금방 알 수 있다. 간단한 예로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한 서술에서도 외세를 끌어들이고 대동강~영산만 이남의 영토 내에서 통일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대목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와 백제의 전통을 수용하고 경제력을 확충함으로써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대목은 사실에 바탕을 두기는 했으나 역사학자도 역사를 서술하는데 있어서 가치 지향적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명한 역사가인 E.H.Carr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는 말을 통해 역사에서의 역사가의 이러한 가치 지향성은 불가피함을 인정하였다.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로 역사학을 서술하는 당시의 역사가나 사관들도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우리가 흔히 역사를 강한 자 또는 승리한 자의 역사라고 보는 시각에도 이러한 가치 지향성이 담겨 있다.

한 왕조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망한 왕조의 폐해와 문제점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새 왕조의 성립이 그래서 명분이 있고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서 특히 잘 드러난다. 사실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보고하는 것이 목적인 신문이나 뉴스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것들은 사실에 근거할 뿐 결코 사실의 전달에서 멈추지 않는다. 신문마다 특정 사실을 바라보는 가치관에 큰 차이가 있으며 문장 속에 그러한 가치관을 교묘히 녹여낸다. 뉴스에서도 마찬가지이다(수강생 A).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가진 이론적 틀, 우리의 기대와 이전의 경험에 갇혀 있다.¹⁾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결코 객관적인 세계가 아니라 역사적 · 문화적 ·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가치와 의미로 만들어진 그리고 그것들로 가득 찬 특수한 세계이다(박동섭, 2008d).

이데올로기 비판가였던 만하임은 날카로운 감각으로 가치중립성 원칙의 난점을 파악했다. 만하임은 스스로도 “가치중립적”으로 논증할 수 있기를 희망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깨닫고 있었다. “가치 평가는 이보다 심층적인 차원(혹은 암묵적인 차원 혹은 눈에 보이지 않은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배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하자면 개념 형성의 시점적인 (Perspective) 성격 속에 가치 평가는 이미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가치중립성의 문제가 이 같은 의미에서 새로이 제기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²⁾

일정한 분야에서 탐구의 방향, 연구가설을 확증하거나 거부하는 척도, 자료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기준 등은 모두 가정이나 규약 혹은 목적들로 이루어진 규범적 틀을 지칭한다. 따라서 사회 과학적 지식은 더 이상 엄격한 의미에서 가치 자유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없는데, 전통과 그 선입견들에 의해 제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학적 지식들도 일정한 규범과 방법들을 개발하며, 일정한 검증 기준과 반응 기준에 의존하고, 과학적 발전에 관해 일정한 가정들을 갖는다. 따라서 실증주의에서 말하는 의미에서 중성적이거나 객관적인 사실들에 관한 관찰이나 이론적 가설들의 확증이란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전통의 제약을 받지 않는 관찰이나 확증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See as).

1) K.R. Popper, "Normal Science and its Dangers," in I. Lakatos, A. Musgrave(Hrsg.)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1970, S. 56.

2) K. Mannheim, *Strukturen des Denkens*, op.cit.,S.275/276